<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국민의 세금 부담률은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부유층은 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내고, 저소득자도 29%를 부담한다. 사회보장세를 고용자가 부담해 피고용자당 31.42%를 국가에 지불한다. 특별소비세도 높다. 유류세는 57%에 이른다.

스웨덴은 1991년 이후 개혁을 통해 세금 부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2009년까지 평군 GDP 성장률 2.4%로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1.8%보다 높았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세금이 높고, 복지 지출이 높으면 경제성장이 낮아진다는 것이 알반적 상식이다. 그런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는 예외다. 세금이 높고 복지가 가장 후하면서도 경제성장률도 매우 높다.

세금은 많이 내지만, 다시 복지를 통해 돌려받는다는 믿음이 있고, 형평성 있는 분배가 이루어져 국민 간의 차이가 줄어들어 서로의 위화감도 적다. 실직과 병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일시적이나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기 때문에 삶 자체가 불안하지 않다고 믿는다. 그런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국가와 공무원을 믿는다. 개인, 지역, 계층 간의 차이가 적다 보니 서로 반목하는 것도 줄어들고, 사회적 갈등도 함께 줄어든다.
(27-29

 (1인당 입안 건수 1년에 70개. (29-30)

실직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업수당, 재취업교육, 업종변경 등의 국가지원체제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면 그들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대책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정리해고에 대항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크레인에 올라 장기농성에 돌입하며,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시도한다. 불안한 사회의 징표다. …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를 보면 스웨덴은 2010, 2011 2년 연속으로 스위스에 이어 세계 2위.
그러나 복지국가에는 복지병이 있게 마련.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문제. 뭐든 공짜라고 하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혜택을 보면 된다는 생각이 문제.. 딜레마. 만약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할당된 쿼터에 따라 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자신도 기꺼이 따를 용의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안 지킬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면 당연히 자신만 지키는 것이 우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 ㄱ단속에 걸리더라도 뇌물을 써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회일수록 더 기승을 부려 우리의 공공자원은 점점 빨리 소모되거나 오염될 수 있다. .. 우리의 행위는 항상 다른 사람 행위의 여부에 따라, 그리고 제도와 법의 공정성에 영향을 받는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라스 노스(Douglas North)는 서로를 믿고 협조할 때 사회의 효용성이 극대화되고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37)

P선배, ‘미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를 선물해드렸더니 장문의 문자로 비평을 주시더군요. 그렇게 문자 토론을 짧게 한 뒤, 갑자기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를 읽고 다음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근데.. ‘다음 토론’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 결국 주말에 책 사서 봤는데.. 술술 읽혀요. 스웨덴, 왜 이렇게 멋진 겁니까. 그 중에서도…. ‘상생’, ‘대통합’의 좋은 사례.
마침 리뷰용으로 메모 중이라…책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타게 에를란데르(Tage Erlander) 45세의 나이로 총리에 올라 68세에 자진하야 할 떄까지 23년간 재임하면서 스웨덴 복지의 상징인 ‘국민의 집(The People’s House)’를 완성. 재임기간 11번 치른 선거에서 모두 승리해 민주국가 정치인 중에 가장 긴 연속 통치 기록 보유…
재계 역시 40대 총리의 급진적 사고방식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에를란데르 총리는 재계의 협조가 없으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제일 먼저 설득 작업에 나섰다.. 매주 목요일 만찬 때마다 재계의 주요 인물들을 불러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만찬 장소에 노조 대표들도 초청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노사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재계와 노조는 국가경제의 양 날개이므로 이들이 적대적 관계에 있으면 경제가 날아오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목요일을 노조와 재계가 만나는 날로 정하고 총리로 재직하던 1950~1960년대 꾸준히 대화의 정치를 펼쳐나갔다. 스웨덴 역사가들이 이를 ‘목요클럽’이라 명명할 정도로 에를란데르의 목요 대화 정치는 상생의 정치에 초석을 깔아주었다.
이 기간..작업장에서는 파업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국민의 삶의 질은 빠르게 개선되었다. 전 국민 의료보험, 4주 휴가제, 전 국민 연금지급, 9년 무상교육, 100만호 주택건설을 추진. ..
매년 여름휴가 기간이 시작되면 에를란데르는 총리 별장에 노사정 확대 회의를 개최해 국가의 현안과 경제성장, 사회정책,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까지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구하는 대화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갔다. 이 별장의 이름은 하르프순드(Harpsund)인데, 역사가들이 이 대화의 정치 모형을 ‘;하르프순드 협의민주주의’로 명명할 만큼 스웨덴의 상생의 정치, 대화의 정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주요 국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스톡홀름의 하가 성(Haga Castle)으로 정당 당대표들을 초청해 대연정에 준하는 정치적 동의를 구하는 그의 모습에 국민을 박수를 보냈다. ‘하가의 협상’이라는 표현이 역사책에 기술되어 있을 정도다.

모든 공적인 행위는 그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정보접근에 대한 원칙이 스웨덴 역사에 맨 처음 등장한 것은 1766년 헌법에서다. … 요지는 이렇다. 국가결정이 몇몇 사람의 탁상공론을 통해 결정되면 권력기관이 썩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의회와 행정기관의 결정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 모든 기관의 결정 과정과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해당 공무원은 공무상 과실로 처벌받게 되엉 ㅣ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모든 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하기 위해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스웨덴 국민은 정치인에게도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결정된 사항이라도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 예를 들어 골프 치며 나눈 개인적 거래가 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다. 모든 회의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웬만한 공공기관들의 담당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난다. 뒷거래를 시도한다고 해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언론의 안테나에 잡히게 마련이다. …. 정치와 행정이 꺠끗할 수 밖에 없다. 정책결정과정에 비친 정치인과 관료들의 사고, 언행, 소신 등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국민은 다음 선거에서 판단을 내리기도 쉽다. 정치인의 능력과 무능력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정치가 정착되는 밑거름.
국민 생활양식도 공개주의에 따라 투명하게 생활하도록 영향을 준다. 탈세, 뇌물공세, 이권청탁 등이 배제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습관과 관행이 몸에 배게 된다. 스웨덴 지하경제가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적고, 탈세율 또한 낮은 이유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2010년 한국은 178개국 중 39위(5.4저)을 차지한 반면 스웨덴은 덴마크, 뉴질랜드, 싱가포르에 이어 핀란드와 공동으로 4위(9.2점)를 기록했다. 부패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덴마크도 정보공개 및 접근법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60-61)

노노갈등을 없애지 않고는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 제안. 일명 연대임금제가 채택된 것. 노동자의 격차도 줄이지 못하면서 사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취지. 에를란데르는 1955년부터 렌-마이드너의 연대임금제 모델을 적용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분배정책, 산업정책, 경제성장정책을 새롭게 편성하겠다고 천명했다.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기꺼이 임금동결에 응해주었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협조로 임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기업은 여유자금을 공장 증설과 새로운 산업 진출 등에 투자했고, 임금인상에 못 이겨 도산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스웨덴의 산업경쟁력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였는데, 그 동력은 바로 노노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연대임금제에서 비롯되었다…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조력사조럿, 그리고 함께 일하는 협조자로서 국민에게 인식. 노조가 도덕적 정통성을 확보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따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65)

1995년 다음 총리가 확실시 되던 뉘그렌 정무장관 “저에게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에게는 아빠가 제일 필요할 때입니다. 정치는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아이의 어린 시절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교육과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총리직 제안을 정식으로 사양합니다”, 그 다음 유력 인물 빈베리 부총리 “저는 국회의원을 거쳐 장관, 부총리까지 정치계에서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만큼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주어진 역량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석하게도 총리가 될 만한 자질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탈렌 사회부 장관 “저는 정치에 입문해 지금까지 한 가지 목표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약자, 사회적 소외계급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에 저는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배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자 합니다” (136-137)
꺠어있는 국민이 일하는 정치인을 맏느다. 의식 높은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정책 공부ㅠ를 하고, 의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공부한 실력을 발휘한다.. 인신공격, 장관혼내기, 핀잔주기, 고성과 폭력은 전혀 끼어들지 못한다. 그 순간 국민의 지탄, 퇴출 확실시. (

스웨덴 민주주의..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양성평등도 세계에서 가장 잘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성의원 비율이 47%에 이른다고 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무리입니다. 아직도 여성이 받는 봉급은 남서으이 87% 밖에 안되고,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은 15% 밖에 안 되죠. 최상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순들이 없어져야 합니다…정치에 대한 스웨덴 국민의 관심도 열의는 매우 뜨겁습니다. 투표율도 85%에 이르지요. 하지만 이민자 출신 스웨덴 국민 투표율은 60%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저소득. 저교육층, 실업자 투표율은 50% 밖에 안되요.. 그러니 스웨덴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진단할 수 밖에요.. 국민을 분열시키는 중요한 정책사안에 있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평상시에도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정당, 시민단체, 국민이 합의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사회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주민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 민주주의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혁해나가지 않으면 정체되거나 후퇴합니다.. 국민은 인터넷 투표, 스마트폰 투표, 부재자투표, 우편투표, 후회투표제(우편투표 허용시 투표 당일 마음이 바뀌어 다른 정당 혹은 후보에게 투표하고자 하는 유권자에게 1회에 한해 정정투표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이동투표함제도 등을 확대해주길 원합니다.. 브리타 레이욘 전 민주주의 장관.

(177-182)
지니계수 . 덴마크, 스웨덴 1, 2위.
사민, 중도, 보수 계열 정당 모두 삶의 기회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는데 동의. 무상교육 등.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강자로 바뀔 수 있는 구조. 또 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갈등을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 데모를 할 필요를 거의 찾지 못함. 사회적 갈등의 해결 창구 역할을 하는 의회에서 모든 문제가 수용되고, 타협과 협의르 통해 해결책이 제시되어 법제화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국민은 경제생활과 개인의 가족생활에 충실할 수 있다. (257(

2010년 기준 기초생활비 지원받는 가정 24만 중 내국인이 51%. 망명객 13%. 기타 이민자 36%.

1930년대까지 노동 파업일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 1931년 파업 행진 노동자에게 군대가 총을 발포, 5명 사상자 발생. .. 정부는 발포 책임자 문책 사법처리 약속. 다시는 평화적 시위에 폭력으로 대처하지 않겠다고 다짐. 노조도 폭력시위 자제 약속.